

선거 관리 재설계 · 책임 규명 병행해야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사태는 단순히 한 선본원의 일탈로 규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건의 구조적 원인은 선거 관리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 있다. 부정투표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책임 묻기는 필요한 수순이지만, 본질은 선거 관리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

사건은 선거관리자가 기표소 현장을 비운 시간 동안 발생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환경은 구조적 관리 실패에서 기인한다. 선거관리자 부재,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본인 인증 절차의 허술한 설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무용대 기표소에서의 대리 투표는 관리 공백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관위원이 부재한 사이 선본원이 타인의 학번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NFC 카드를 발급받아 총 17건의 부정투표

를 행사했다. 단순히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상황 자체보다도, 관리 미흡이 즉시 심각한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스템적 취약점이 선거 과정에 내재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관리 실패는 한 곳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선관위의 기표소 CCTV 전수조사 결과 경영대 기표소 역시 점심시간에 선관위원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무용학부 기표소 부정투표를 예외적 일이 아닌, 구조적 관리 하점에서 발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거 관리 혼란은 세칙 운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총학생회 선거 세칙과 단과대 선거 세칙이 서로 상이해 기표소 관리 주체가 단일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동시에 단과대 선관위에 명령을 직접 행사할 권한은 없었다. 이러한 '책임은 있으나 권한은 제한된' 구조는 관리 실패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을 명확히 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투표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에 대한 책임 규명이다. 관리 공백을 초래한 선관위원, 세칙 정비를 소홀히 한 각 단과대 선관위,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중선관위 등은 모두 사건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이를 회피한다면 학생 사회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표소 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편이다. 선거기간 동안 상시로 관리 인력이 배치되도록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본인 인증 절차 역시 강화해 타인 정보를 이용한 인증이나 대리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물론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가 개인 잘못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부정투표의 직접 행위자인 선본원 개인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부정투표를 저지른 당사자와 관련자에게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건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사회 내 선거 공정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절차다.

부정투표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학생사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학생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학생社会의 신뢰와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다전공 의무이수제 도입

변화의 책임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에 그쳤다. 이미 제도 도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나마나한 답변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240명 중, 약 100명이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될 상황에서 강의 수 부족이나 강의실 공간 문제는 조속한 대안이 필수다. 김성수 교무처장은 “전정·소융대 주변에 있는 국제대, 예술·디자인대와 협의가 되어 남는 강의실이 있으면 대여해주는 협조 체제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이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단기간에 완벽한 체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변화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확장과 보완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과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는 현실적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실행이다.



만평 다전공 의무이수제 정착으로 가기 위한 길이 험난하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벌써 일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1년 전, 오늘과 다를 것 없이 무난한 하루를 보내고 자취방에 돌아왔다.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회면엔 친구들의 소소한 일상이 아닌 줄지어 날아가는 헬기들이 찍힌 영상이 나왔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침입하고 있었고, 여의도 도로엔 장갑차가 등장했다.

시대착오적인 풍경에 눈을 의심했지만 실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강풀작가의 만화 〈26년〉의 도입부와 같은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군인이었던 친구가 보낸 “새벽 2시까지 못 자고 떨고 있다”는 문자처럼 나 또한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먼저 생각났던 건 가족들의 안위였다.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물었고, 부모님께선 “아들이 전역한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더 늦게 입대했다면, 어쩌면 민간인 앞에서 총을 들고 있던 TV 화면 속 군인은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도 도로 위에 서 있던 장갑차가 문득 떠올랐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시 출동했던 군인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일 년이 유명한 노랫말처럼, 벌써 1년이 지났다. 이젠 다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날의 기억이 박혀있다. PTSD는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에선 조금씩 잊히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치료할 준비를,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제1야당 대표는 여전히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당사자는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입장문을 냈다.

그날 새벽, 막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지난 1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의 앞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겨울이 찾아온 서울엔 첫눈이 내렸다. 우리 삶에 앞으로 눈처럼 쌓일 기억들은 그날과는 다른 의미로 남으면 좋겠다.